

지역발전과 혁신체제의 구축 : RIS와 NIS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선배, 정준호(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본 논문은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에 있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체제에 대해 그 개념과 구축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국가경제발전의 지역화 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혁신체제 즉, 국가혁신체제(NIS), 지역혁신체제(RIS),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면과제인 '중요요소생산성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혁신체제는 국가경제발전의 지역화 전략 하에서 그 방향이 도출되어야 하고, 인구 4천7백만의 한국경제는 안정적·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해 단핵형 경제권보다는 다핵형 경제권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NIS를 구축하고, 임계규모(critical mass) 충족을 위해 인접한 광역 시·도를 포괄하는 경제권역을 단위로 전략적 관점에서 RI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권역별 거점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어 NIS와 RIS를 상호 연계시키고, 권역내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규모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허브-스포크형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혁신체제는 국가적 효율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NIS-RIS 연계를 토대로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및 기획력, 그리고 지역의 자원 및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 분야에서 중앙부처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권역내 지자체간의 경쟁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즉, 혁신체제 구축사업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책이 일방적으로 지역으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임계규모 형성이 가능한 지역(경제권역) 차원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적 분권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혁신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분야 및 경제권역별 세출예산의 배정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에 기반을 둔(performance-based evaluation) 성과협약제도 이행과 평가·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